美 관세 '선착순 딜'…韓, 내주 협상 개시할 듯

美, 한국 등 5대 우선협상국…내주 본격적인 협상

"처음으로 합의 타결하는 자가 가장 좋은 합의 얻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한국·일본 등과 우선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과의 협상은 내주주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향후 신규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 5개국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5개국은 협상 최우선 대상으로, 베선트 장관이 이미 당국자들과 접촉했다. 일본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16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국면에서 행정부 내 가장 무게감 있는 조언자로 떠올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하자마자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해 "10곳이 넘는 국가에서 매우 좋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며 "거래가 충분히 좋은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우 내주께 본격적인 협상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과는 이번 주, 한국과는 내주 논의를 시작하리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리라고 예고하고, "처음으로 합의를 타결하는 자가 가장 좋은 합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빨리 합의를 이룰수록 유리하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보 문제를 관세 협상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다"라며 패키지를 언급한 상황이다.

협상의 범위가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며 90일의 유예 기간이 다소 촉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완화를 우선 목표로 삼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韓 등재' 美민감국가 발효…"적극 교섭"

"한미 R&D 협력 영향 없는 것으로 재확인"

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등재했고, 효력은 이달 15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지난 달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본 사안은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 또는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민주당, 홍준표 여론조사비용 대납 문건 관련 수사 촉구 서영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론조사비용 대납 문건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일 도의원 "30개월령 이상 美소고기 수입 막아야"

전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 의원이 최근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한 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 감염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소고기 아시아 최대 수입국이자 한미 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라며 "일본과 같은 기준을 내세우며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월 500명 이탈" 조옥현 도의원 "정책 전환을"

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의원이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출산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좌절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20~39세 청년인구 5944명이 순유출됐다"며 "전남은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월 20만 원, 1년의 단기 지원에 모집기간도 2주에 불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기간 연장, 진입장벽 완화, 프리랜서·창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정책을 일자리와 연계,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역 기업과 협력한 정착형 통합지원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수업 거부 지속…대규모 유급 우려

전남대, 수업 참여 10% 안팎·조선대 역시 저조

내년 의대 정원 맞물려 이달 중 유급 통보 수순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이 복학 이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학사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규모 유급에 따른 학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이달 7일부터는 모든 의대 수업을 강의실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 강의 참여율은 과목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수강생의 10% 안팎으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요건인 실습 강의 5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본과 4학년부터 유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대 역시 온라인 비대면 강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만이 수업에 복귀한 상황이다.

조선대 의대는 현재까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 당장은 유급을 고려치 않고 학년 말에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 등 변수가 많아 유급 통보 시점이 바뀔 수도 있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징계가 내려진다.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학적 말소)도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유급은 학년 말에야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 시점과 맞물려 올해는 유급 통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 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최근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급 처분을 결정하거나 유급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정상 수업이 이뤄질 정도의 복귀가 이뤄져야 의대 모집 정원을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업 복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각 대학도 본과 3·4학년, 예과생들의 수업 일수가 미달되는 이달 말이면 유급 예정 통보에 나설 수도 있다.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24·25·26학번이 한 번에 예과 1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지면, 수강신청부터 평가 업무까지 교육 전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게 우선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과 맞물려 당초 학년 말이던 유급 통보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고시 응시를 위해 실습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본과 3·4학년들은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도기 기자

운영위, 민주당 주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가결

'韓 월권행위 사과' '권한쟁의심판 지지' 등 담겨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월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이재명·김경수·김동연…민주 3자 경선 본격화

"내란종식·국가대개혁 경선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어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선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산해 27일 선출한다. 만약 절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통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당내에서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은 전날 경선 룰에 반대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며 "빛의 연대와 연정, 완전한 내란종식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갈 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후보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나눈 대담 영상을 공개한다.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한 대담으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김 전 지사는 자영업자들을 만나 민생 행보에 나서고, 김 지사는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대응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뉴시스

"'필수추경' 2조 증액한 12조 편성"

최상목 "산불복구·통상대응·내수회복"…민생지원 중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했다.

광주 정치권,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위로

광주지역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의 참혹함과 비통함은 우리 마음속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다"며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304명이 희생된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 최근 해양심판원 재결을 통해 드러났다"며 "심판부는 침몰의 주요 원인을 안전관리 부실과 무리한 조타 및 항해 과실 등 총체적인 선체 관리부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키지 못해 304명이 희생됐다. 책임을 통감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슬픔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긴다"고 추모했다.